

복지분야 늘고 SOC 대폭 줄어 ...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

광주·전남 내년 정부예산 살펴보니

광주,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등 안정적 국비 지원 가능 전남,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반영 안 돼 아쉬움

광주·전남의 내년 정부 예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복지분야가 늘고, SOC 사업은 대폭 줄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예산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중요 사업의 정부 예산이 반영됐지만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과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등 광주·전남의 일부 주요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 반영 사업은=전남도 주요 사업 반영액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154억원(건의액 300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455억원(3000억원)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건설 1999억원(350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억원(500억원) 등이다.

발 용역비(8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비(20억원) ▲치과 등 생체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기업 지원(15억원) 등 43건 768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만들었다.

◇SOC 등 일부 예산 미반영=전남도의 가장 안타까운 사업은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 1869억원 중 내년에 설계비로 67억원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광양항의 하역능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초과 물동량(560만TEU) 소화하고 향후 증가할 물동량을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 검사에서 C·D등급을 받아 개선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해수부도 이를 인정해 예산을 반영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건의액 대비 2000억원 이상 삭감된 사업까지 생겨나면서 전체 SOC 사업 건의액의 60%가량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비상이 걸렸다.

수산식품 수출 단지(사업비 1000억원) 35억원, 해경 제2정비창 구축(1500억원) 조사용역비 5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1590억원(8.7%) 증액됐다. 기초연금 8341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35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93억원 등이 편성됐다.

SOC 확충으로 여수~남해간 고속도로 사업과 벌교~주암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사업도 누락됐다.

이밖에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109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72억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구축(63억원) 등 미래성장 동력이 될 현안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성과로 평가됐다.

여수~남해간 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동서 화합 차원의 상징적 사업이기도 하다. 또 벌교~주암간 국도 확장은 대부분의 구간이 4차로 확장을 마쳤는데 일부 구간만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병목현상이 나타나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 국도 확장공사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과 보건복지노동 예산 증액 방침에 따라 광주시의 관련 예산에서도 희비가 교차됐다. 광주시는 애초 2조230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조7803억만 반영되고, 4500억원은 미반영됐다.

광주시의 정부예산안에 신규사업은 43건 768억원, 계속사업은 186건 1조7035억원이 반영됐다.

중요 미반영 사업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시 신청액 45억원) ▲레독스 흐름터지 소재 부품 기업성장지원(20억원) ▲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문화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분야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75억원),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42억원) 등 52건 1019억원이 반영됐다.

중요 미반영 사업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시 신청액 45억원) ▲레독스 흐름터지 소재 부품 기업성장지원(20억원) ▲자

또 지역경제활성화, 신성장동력사업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187억원), 수소 전기차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20억원) 등 76건 2212억원이 포함됐다.

중요 미반영 사업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시 신청액 45억원) ▲레독스 흐름터지 소재 부품 기업성장지원(20억원) ▲자

복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4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50억원) 등 46건 1조 2383억원이다.

중요 미반영 사업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시 신청액 45억원) ▲레독스 흐름터지 소재 부품 기업성장지원(20억원) ▲자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는 ▲광주형일자리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 개

중요 미반영 사업은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시 신청액 45억원) ▲레독스 흐름터지 소재 부품 기업성장지원(20억원) ▲자

■광주시 주요 신규사업 반영현황

사업명	총사업비	'18 반영액
치과 등 생체흡수성소재 부품 중소기업 지원	170	15
스마트 침단의료로봇 산업 혁신지원	380	5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 제작 가치사슬혁신 지원	205	10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380	3
광주송정역사 증축 (용역결과에 의거 추후 결정)	미정	20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00	4
광주형 일자리모델 개발 용역	8	8
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전시공간 구축	94	1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주변 녹화	60	10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330	50

■전남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사업명	총사업비	정부 반영액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	235	9.1
기계부품 가공 고도화 지원센터 구축	308	18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	310	40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반 원격의료 플랫폼 구축	84	10
농생명 치유산업단지 조성	1,300	5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00	200
광양항 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 구축	720	4
광양항 수역시설정비 (특정해역 준설)	2,954	45.31
연안여객선 현대화	1,000	300
순천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300	2.75

동차전장부품 고안전 지원체계 구축(30억원)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구축(50억원) 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정책토의 문제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일자리·복지 예산에 공간 문 활짝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곳을 과감하게 연다.

내년 재정 총지출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기 쉽지 않은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기게 됐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계돼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지출 증가율 9년 만에 최고... '건전성보다 재정 확대가 더 먼저'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429조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무려 7.1%나 더 많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포인트(p)나 높다. 다시 말해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뜻이다. 내년은 새 정부가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해기 때문에 임기 내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소요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공적·기초연금 등 정부 재량으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197조원에서 218조원으로 10% 넘게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게 된다. 적극적인 재정에도 관리재정 수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수출 회복세, 부가증세 효과 등에 따른 세수 수입 증대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덕분에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총량 면에서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 SOC와 산업 등 이른바 '물적 투자'를 줄이던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복지 예산 '경중'... 소득주도 성장 기반 다지기=올해보다 12.4% 늘어난 내년 일자리 예산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재정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일자리 예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여성 등 취약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가계소득 감소→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내년 생활·안정분야 공무원을 1만5000명 늘리고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등 고용 확대에 대응해 재정을 적극 동원하기로 했다. 아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일 학습 병행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 일자리 질도 높인다. 실업급여 인상,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실업 안정망 역시 강화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가계의 소득기반도 확충하는 차원에서 아동·노인 등에 대한 보편적 복지도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나 늘어난다. 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19조1000억원)보다 20%나 줄어들었다. R&D 예산은 19조6000억원으로 올해(19조5000억원)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 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국가부채총량 관리 필요" =문제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다. 특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은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 지출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재원 조달안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이나 세수에 대한 전망을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기기자 jkpark@연합뉴스

이유정 현재재판관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 3당은 이 후보자에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명시한 '부적격 의견 보고서'라면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여당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동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 기간 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줄곧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특정 정당 선거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면서 후보자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5

광주일보 연속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40원 → [인상 후] 100원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2017년 1월 1일 이후)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2017년 1월 1일 이후)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기타 제품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